

2018

Report

of Trend



2018

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

규제완화 정책
동향보고

2018.06. part1 제 99 호

Contents

I . 정부 추진동향

1. 정부 , ' 국가균형발전 ' 지역발전투자협약제 정책연구 본격 착수 3
2.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역 혁신성장 박차...예산 및 인 · 허가 지원 4
3.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재걸음 5

II . 수도권 추진동향

1. 잠재성장률 · 청년실업률 돌파구로 ' 수도권 규제개혁 ' 활용해야 6
2. 일자리 94 만개 늘텐데 ...! 금기어 ' 된 수도권 규제 완화 7
3.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촉각 8

III . 비수도권 (지역) 추진동향

1. 균형발전지방분권총북본부 , 시민사회차원 강호축 공론화 나선다 9

1. 정부 , ' 국가균형발전 ' 지역발전투자협약제 정책연구 본격 착수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6.07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뉴스토마토

02

주요내용

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(계획계약)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'한국형 계획계약제도'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7 일 밝힘

-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모델
-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는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
-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일자리창출과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계획
- 이번 정책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 발주했으며 국토연구원이 연구를 총괄해 추진
 - 연구 수행 기간은 내년 1 월까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
- 아울러 균형위는 이 제도가 처음 추진되는 만큼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등도 정비할 계획
- 국토부 관계자
- 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해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

2.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역 혁신성장 박차...예산 및 인·허가 지원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6.1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NEWSIS

02

주요내용

■ 산업부,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

-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'국가균형발전 특별법'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
-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후속조치
- 정부가 지역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인·허가를 신속 처리할 수 있게끔 함
 -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시·도별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키 위해 혁신도시·산업단지·경제자유구역·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해 지정하도록 명시
 - 대표산업과 면적·반경, 정주여건 등도 고려
 - 또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예산을 지원하고, 인·허가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
- 산업부 관계자
 - 각·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㎢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과 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
-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'시행령 개정안은 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도 출범키로 함
 - 지방정부 주도로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
 -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두고,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음
- 개정안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산업부 중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
 -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지역현안 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하는 예산지원 제도
 -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여러 부처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됨
-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
 -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,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
 - 입법예고,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

3.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 쟁점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6.14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디지털타임스

02

주요내용

■ 중기부 "3 분기 연구용역 시행, 법안 심사 시 쟁점 사안 확인"

-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신기술·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'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' 도입에 속도를 낸다.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'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(지역특구법)'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혁신특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.
-
-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(이하 혁신특구)는 신기술·신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향토사업 중심인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 개념에 새로운 유형인 '규제샌드박스' 개념을 도입한 제도다.
-
- 중기부 관계자는 "혁신특구 도입방안 연구 사업을 최근 공고했다"면서 "3 분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혁신특구 관련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법안 심사 시 주요 쟁점 사안을 확인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-
- 발의된 지역특구법의 개정안의 조문별 타당성을 검토하고, 시행령·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된다.
-
- 또 연구를 통해 혁신특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도 마련한다. 혁신특구에 적용할 신기술과 신서비스 등의 지역사업 발굴과 사업별 시뮬레이션, 규제 해소 세부방안과 혁신특구의 세제·재정지원 방안도 수립한다. 일본 등 해외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추진사업도 조사할 예정이다.
-
-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혁신특구는 수도권 제외 전 지역에 도입된다. 중기부는 제도의 근거법이 마련되는 대로 지역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. 혁신특구 지정은 시·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민간기업의 수요를 받아 신청하고,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는 형태로 진행한다.

1. 잠재성장률 · 청년실업률 돌파구로 '수도권 규제개혁' 활용해야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6.03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부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과 청년실업률 해결의 돌파구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광역수도권 발전법으로 대체입법하고, 수도권에도 지역혁신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

- 경기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'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' 보고서를 발표
 - 일본 수도권 규제개혁 전개과정과 효과 · 국가전략특구 내용을 분석, 국내 수도권 규제개혁 방향과 특구정책 전환을 제안
-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규제개혁
 - 도쿄 수도권 공장입지가 경미하게 증가했지만 종사자는 오히려 감소
 - 대신 실질적인 지역총생산액 (GRDP) 이 성장하고, 도쿄와 인근의 도시재생 효과
 - 실업률은 규제개혁이 본격화된 2002년 5.4%에서 2012년 4.3%, 올해 2.9%로 낮아짐
 - 이 기간 청년 실업률은 9.9%에서 3.8%까지 떨어짐
- 2013년 아베 정부가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, 3차례에 걸쳐 총 10곳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·개발
- 규제개혁 효과가 대도시권에 있다는 판단 하에 도쿄권, 간사이권에 우선적으로 지정
- 이같은 규제개혁 정책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.8%에 머물고, 청년실업률이 9.9%를 기록하는 시점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보고서는 분석
- 이상대 경기연 선임연구위원
 - 수도권 규제정책의 광역수도권 발전법 대체입법
 - 과밀억제, 성장관리,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규정 폐지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업생태계 형성
 - 수도권 특구 제도 재검토 및 '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' 특구 지정대상에 수도권 포함 등을 제안

2. 일자리 94 만개 늘텐데 ...! 금기어 ' 된 수도권 규제 완화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6.1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서울경제

02

주요내용

■ 지역균형발전 ' 대원칙에 갇혀 서울 등 혁신성장특구서 제외 투자유치·고용창출 기회 날려

- 성장 엔진이 멈춰선 한국 경제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
 - 국내에서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판매하던 스웨덴계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A 사는 아시아 생산거점 육성을 목표로 공장 증설을 검토
 - 이를 막아선 것은 수도권 규제 . 공장총량제 등 규제로 결국 A 사는 사업장을 중국으로 변경
 - 이로 인해 4 억달러 , 1, 000 여명의 고용 창출 기회가 사라짐
- 일본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사이 여전히 '개발연대' 시절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뿐
 - 일본은 지난 1950 년대에 도입한 수도권 규제로 도쿄의 성장 잠재력이 악화됐다고 판단해 1990 년대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
 - 2000 년대에는 수도권 구시가지의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잃어버린 20 년에 대한 반환점을 맞았다는 평가
 - 영국과 프랑스도 런던과 파리를 '기업 하기 좋은 도시' 로 만들겠다고 인공지능 (AI) 기업 등 4 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줄였음
- 이미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음
 -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신증설 규제 완화 등으로 94 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
 -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총생산 (GDP) 이 4.7% 성장할 것
 - 노사정위원회는 연간 총생산액이 16 조 3,000 억원 늘어나고 국세도 3 조 1,000 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음
- 우리나라 정부는 그럼에도 '지역균형발전' 이라는 대원칙의 울타리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음
- 중소벤처기업부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청원입법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정안이 대표적
 - 법안에 따르면 서울·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 제외
 - 국토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초를 반영한 셈
 - 수도권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만 9 개로 중복규제라는 지적
 - 국토기본법을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,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,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
- 노무현 정부 때 정책을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
- 전경련 관계자
 -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종 분권을 고민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그보다 못한 선택을 하고 있음
 - 수도권을 조인다고 지방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답답한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는 게 현실
- 실제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 경기도 내 기업 141 개가 지방으로 이전한 사이 1 만 6,738 개가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음

3.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촉각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6.11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경기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송도국제도시 신성장클러스터 사업 추진 설득력 강화 전망 속 수도권지역 포함 역차별 우려

- 정부가 지난 3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힘
-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,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할 계획을 제시하면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클러스터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
-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이 담겼음
 - 산자부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,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,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과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
 - 즉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,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 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, 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각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,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
 - 아울러 그동안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된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여러 부처를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
-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등 경제자유구역에 걸맞는 인천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
- 그러나 관련 특별법이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,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되 클러스터 조성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나오고 있음
-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말함

1.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, 시민사회차원 강호축 공론화 나선다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6.11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충북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강원·충청·호남지역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운동조직에 '강호축' 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

- 강호축은 강원과 충청, 호남을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강원과 충청, 호남지역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의미
-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
 -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강호축이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, 이달 말까지 광역 시·도의 지역발전 5 개년 계획 초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
 - 강호축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시급히 채택돼야 함
 -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
-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향후 계획
- 강호축 8 개 지역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운동조직 등과 함께 강호축의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, 정책워크숍, 정책토론회 등을 연쇄적으로 개최
- 그 결과를 해당 8 개 광역 시·도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달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